

제15권 19호

2025. 9. 29~2025. 10. 19

하나로여겨된
모두의금융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논단** 주요 산업 구조조정에서의 금융권의 역할
- 이슈분석** 에너지 고속도로에서 시작되는 인프라 혁신
- 금융경영브리프** JP Morgan, 소비 생태계 구축으로 카드 1위 공회화
글로벌은행, CS 공백에 스위스 진출 확대
-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美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재개에도 시장금리는 반등
외 환 : 3,500억 달러 투자펀드라는 변수
부동산 : 정부, 공공주도 주택공급 확대(9.7 대책) 추진
-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연구위원 안성학(shahn0330)
연구위원 김혜미(hmikim)
연구원 유승원(youth1)

논단

연구위원 백종호(jongho.baek)

이슈분석

연구위원 오유진(yujin.oh)

금융경영브리프

연구위원 서유나(yuna.seo)
연구원 정안선(ansunc)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연구원 민현하(hyunhamin)
외 환 | 연구위원 김영준(kimekono)
부동산 | 연구위원 황규완(gwhwang)

금융지표

연구원 서유나(yuna.seo)

내용에 대한 문의나 건의사항은 담당연구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ID@hanafn.com)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주요 산업 구조조정에서의 금융권의 역할
- 04 **이슈분석** 에너지 고속도로에서 시작되는 인프라 혁신
- 08 **금융경영브리프** JP Morgan, 소비 생태계 구축으로 카드 1위 공고화
글로벌은행, CS 공백에 스위스 진출 확대
- 12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美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재개에도 시장금리는 반등
외 환 : 3,500억 달러 투자편드라는 변수
부동산 : 정부, 공공주도 주택공급 확대(9.7 대책) 추진
- 18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 다음호(제15권 20호)는 추석 연휴로 인해 10월 20일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주요 산업 구조조정에서의 금융권의 역할*

백 중 호 연구위원

국내 주요 제조업은 내수 부진, 산업 트렌드, 글로벌 통상 환경 등의 변화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최근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 사례에서 보듯이 해당 산업의 위기로 인해 해당 기업의 임직원 외에도 협력사 임직원, 소상공인, 지역 주민 등 미치는 여파가 적지 않다. 금융권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금융지원은 물론,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당 산업 및 지역 회생을 위해 비금융 부문의 지원을 병행해 지역 경제 회복의 파트너 역할을 해야 한다.

중국산 저가 공세와 글로벌 수요 둔화에 더해 미국발 고율 관세 여파로 국내 주요 제조업은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정부는 중국발 공급과잉 등의 여파로 타격을 입은 국내 석유화학 산업을 살리기 위해 산업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3대 방향은 저부가가치 제품의 감산을 유도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스페셜티)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만간 석유화학 산업에 이어서 철강 산업 구조조정도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유화학 산업과 마찬가지로 생산량 감축과 생산시설 통폐합이 예상되고 있어 자발적인 생산량 감축에 나서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 산업이 위치한 지역 경제 및 고용 영향 최소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은 물론 경제 전반에 일정 부분의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석유화학 산업에 이어 철강 산업 구조조정 방안도 발표가 예상

∴ 산업단지는 산업구조 재편, 글로벌 통상 환경변화로 어려움

1970년대 이후 전통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해온 주요 산업단지는 수출산업 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산업단지는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주요 산업단지들은 수십만 명 고용과 연간 수십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왔으며 지금도 국내 제조업 생산 및 수출의 60% 이상, 고용의 절반이 산업단지에서 나온다.

산업단지는 수십 년간 국내외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음

전통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경제를 떠받쳤던 산업단지의 위기는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업종과 지역을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방의 일부 지역은 美 러스트 벨트(rust belt)처럼 유명 도시로 전락할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위기에 놓여있다. 공단 중심의 전통 제조업은 공장 이전 등 산업구조 재편 가속화와 함께 AI기반 경제로 이행해 가는 글로벌 경제 트렌드에 적응력이 떨어져 저부가가치 창출, 성장 동력 저하 등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어 지역 산업의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다.

대내외적 상황 변화로
산업단지 내 제조업의
어려움이 가중

중국산 저가 공세와 국내외 생산 과잉, 수요 부진 등 주요 제조업이 겪고 있는 산업 구조의 공통적인 문제점에 더해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이 가세하면서 설비 최적화와 지역 거점 통폐합 전략이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기, 원자재 가격, 해외기업의 설비투자, 경쟁국 수급상황 등 수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대외변수는 개별 기업은 물론 지역/정부 차원에서 통제가 어렵다는 한계까지 존재한다.

최근 구조조정에 들어간 석유화학 산업은 자동차, 조선과 더불어 대표적인 기간산업으로 산업 특성상 대규모 설비가 필요하다. 장치산업의 특성상 M&A나 자산 인수에 대규모 비용이 필요하고 특정 생산설비에 한정해 분리 매각도 쉽지 않다. 각 주별로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한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누렸던 미국의 자동차, 철강, 조선 산업 쇠락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제조업 생태계가 붕괴되면 단기간에 재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산업단지 내 소상공인 피해 등 지역 경제 생태계가 위협

해당 기업 임직원, 협력사 연쇄 도산 외에
지역 내 서민경제 위기로 이어짐

기간산업이 무너지면 해당 기업의 임직원 실직, 관련 하청업체와 납품 협력사의 연쇄 도산 등의 위기를 유발해 피해가 지역 경제 전반에까지 파급될 우려가 크다. 또한 해당 지역의 산업 침체는 상권 위축과 인구 유출, 세수 감소 등 악순환으로 이어져 서민경제의 위기로도 확산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는 전후방 산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수많은 임직원의 고용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1년간 여수, 울산, 서산 등 3대 석유화학 단지의 주요 설비 가동률이 역대 최저 수준인 70%대로 떨어지면서 (가동률이 80% 이상 유지되어야 수익성이 유지) 협력사의 도산 및 지역 내 공실률 증가 등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석유화학 산업단지의 침체는 지역의 위기로 전이되어 지역 내 음식점, 숙박업 등 소상공인 영업활동 위축도 우려된다. 일례로 '21~'23년 3대 석유화학 단지의 국세 수입은 2021년 20조원에서 2024년 13.4조원으로 33%나 감소하였다.

한편, 철강 산업 위기로 대표적 철강 도시인 포항시도 타격을 입고 있다. 올 상반기에 포항 국가 산단의 가동률은 1년 새 93.1%에서 76%로 감소했고, 2025년 5월 생산액은 전년 동월 대비 7.2%나 감소했다. 지역 대표 상권인 중앙상가의 공실률은 35%에 육박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 일자리 감소로 2022년 6월 포항 인구 50만 명대가 깨진 데 이어 올해 6월에는 48만 명대로 감소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금융권 대응이 중요

기간산업은 정책금융과 시중은행 외에도 주식시장과 회사채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에 다양한 기관 및 투자자들도 엮여 있다. 산업 구조조정은 정부·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권이 연결된 총체적 문제이며 금융권도 산업 구조조정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 우선, 구조조정에는 자금 보조, 융자 또는 출연 등으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앞서 석유화학 구조조정 방안에도 자구노력을 전제로 대출 만기 연장, 원금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이 발표된 것처럼 구조조정 추진 시 금융권의 지원 방안은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다. 또한 구조조정 여파로 인한 대출 자산의 부실 확대 및 충당금 추가 적립은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산업단지와 지역 경제가 침체되며, 고용·소득 감소와 상권 쇠락 등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권의 역할과 지원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권은 기존의 만기연장 위주의 자금 지원, 선제적 구조조정 컨설팅, 설비 현대화 자금 지원, 친환경 전환과 신사업 진출 지원 등 중장기적 관점의 사업 재편까지 포함한 비금융 부문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기업들이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정책금융에 민간금융을 연계해 산업 회생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구조조정은 속도가 생명이다.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해당 지역에서 나아가 경제 전반과 일반 국민에게도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 구조조정이 지역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 시 금융권은 자금 지원은 물론, 사업 재편, 지역 경제 회복을 유도하는 상생 파트너로서 거듭나야 한다. 다만, 금융권이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실효성이 담보됨을 고려할 때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수렴 하에 단계적 로드맵이 신속히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구조조정은 금융권을 포함한 다양한 업권이 연결된 총체적 문제

금융권은 사업 재편,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파트너 역할 필요

에너지 고속도로에서 시작되는 인프라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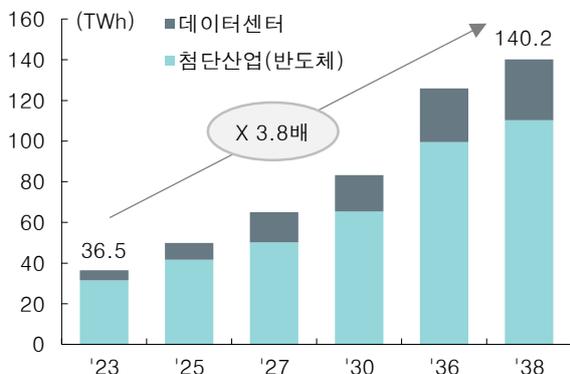
오 유 진 연구위원

에너지 고속도로는 국내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계통 부족 및 전력 소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시행된 ‘전력망 특별법’으로 송전망 건설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행정적 추진체계를 개편하는 등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가 전략 인프라인 에너지 고속도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는 재원 조달방안 마련, 전력시장 제도 개편 및 요금체계 변경, 핵심 기술 확보 등 다양한 이슈 해결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 에너지는 정부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시와 함께 전면내 내세우는 핵심 분야

-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12대 전략과제 중 하나로 ‘에너지 고속도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률과 탄소중립을 함께 달성하고자 함
- 에너지 고속도로는 전력 소비 지역과 생산 지역을 연결하는 초고압 송전망을 의미하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시킬 수 있는 전략 인프라
 - 해상풍력 등 설치가 제한된 재생에너지의 이용을 늘리기 위해 전기 수송시설 필요
- 또한 AI·반도체 등 향후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첨단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기존 전력망의 업그레이드가 요구
 - '38년 국내 반도체 및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23년의 3.8배로 급증
- 정부는 AI·에너지 고속도로 등 국내 경제 파급효과가 큰 메가 프로젝트에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투입을 발표하는 등 전폭적 지원에 나선

■ AI로 인한 국내 전력 소비량 증가



주 :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자료 : 국정기획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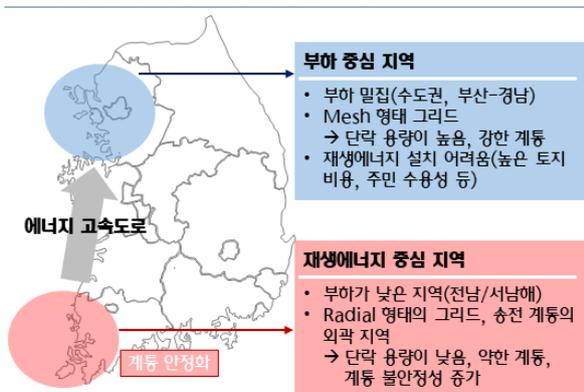
■ 현재 국내는 심각한 계통 포화와 전력 생산-소비 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음

- 송·배전망 등 계통 용량 부족, 전력 수요대비 재생에너지 과잉 생산 등으로 발전소의 가동을 인위적으로 멈추는 출력 제어가 빠르게 증가 중
 - '25년 상반기, 육지 출력제어량(164GWh)은 '24년 전체 발생량의 12배를 기록
- 현재 출력제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은 호남(계통포화), 제주도(초과공급), 동해안(송전제약) 등으로 전력망 확충이 시급
 - 호남에는 원전 6기를 비롯해 태양광의 42%가 집중되어 있고 대규모 해상풍력도 추진 중이지만, 345kV급 이상 송전선로(호남-수도권)은 단 2개밖에 없어 문제
- 수도권은 전력 수요에 비해 발전량이 매우 낮아 전력 자급률이 65%에 불과한 상황이며, 이러한 지역적 불균형은 송전망 과부하와 계통 안정성 저하를 유발
 - 전력 자급률: 수도권 65%, 충청 122%, 호남 129%, 영남 139%, 강원 213%

■ 3단계에 걸친 중장기 대규모 송전망 건설을 통해 전력망 부족 문제 해결

- 1단계로 서해안 1,070km 구간에 8GW 규모의 초고압 직류 송전망(HVDC)을 구축하여 2040년에는 남해와 동해까지 U자로 연결하겠다는 계획
 - 서해안 HVDC 구축 계획은 본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11차 계획에서 건설 구간 및 용량 구성 등을 변경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
- 전남·전북 등 서해안 지역의 해상풍력(약 20GW 이상 계획)과 태양광 발전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먼저 추진
- 한전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의 첫 단계로 새만금에서 경기도 화성까지 220km 구간에 해저케이블을 설치하여 2GW급 HVDC 송전망을 구축할 계획
 - 한전에서는 2031년 완공으로 계획하였으나, 정부가 이를 2030년으로 앞당김

■ 국내 전력 계통의 불균형한 모습



자료 : 한국전력 전력연구원(2022) 자료 재가공

■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HVDC)의 단계별 구축 계획

구분	구간	거리	용량	기간
Phase 1	새만금~서화성	220km	2GW	~2031년
Phase 2	신해남~당진화력	290km	2GW	~2036년
Phase 3	신해남~서인천복합	350km	2GW	~2038년
	새만금~영흥화력	210km	2GW	
합계		1,070km	8GW	

주 :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기준
자료 : 한국전력

■ 최근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으로 송전망 건설 속도 개선이 기대

- 송전망 건설은 경유지 주민의 낮은 수용성, 환경영향평가 등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등으로 인해 설비 구축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사업 난이도가 높은 편
 - 일반적으로 송전선로 건설은 약 9~13년(345kV 기준)이 소요되며 사업 지연이 빈번
 - 동해안-수도권 HVDC는 주민 합의에만 10년이 걸렸으며, 인허가 문제도 여전
- 최근 주민 보상 및 지자체 지원을 강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시행('25.9.26~)되며 전력망 구축 여건이 개선
 - 대용량 송·변전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금이 50% 추가되고, 전력망 구축에 조기 합의한 토지소유주에게 보상금의 최대 75%를 추가 지급하는 등 보상 강화
-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는 전력망 특별법의 첫 번째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1단계 2GW 노선은 빠르게 인허가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

■ 에너지 고속도로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행정적 추진체계 보강 및 개편

- 정부는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내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단'을 마련했으며, 8월부터 범부처 협의체를 가동 중
 - 범부처 협의체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지정 대상을 검토하는 한편, 부지 확보, 인허가, 규제 개선, SOC 공동 건설 등 부처 간 협력과제를 논의
- 또한 지난 9월초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의 지자체 협력과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등을 검토
 - 서해안 HVDC의 중요 거점인 전북 등에서 지역 주민의 반발이 우려
- 10월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에너지 고속도로 등 전력망 개편과 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등의 과제를 종합적으로 주도할 예정

■ 전력망 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주민지원 대폭 강화	주민/토지주에 대한 각종 보상금 확대
주민 등의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주민/토지주 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계통접속비용 지급 등 지원
지자체 지원 확대	가공선로 경과 지자체에 1km당 20억원 지급 등
중앙정부 주도 현안 협의	총리주재 '전력망위원회'를 통해 전력망 갈등 해소
의견수렴 및 신속성 강화	산업부 차관* 주재 '실무위원회'에서 지자체 참석 보장, 의견수렴 강화

주 : 이후 산업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 고속도로 및 재생에너지 보급관련 추진 일정

과제명	추진기한						주관
	25	26	27	28	29	30	
㉠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구축 및 기후테크 산업 육성							
· 서해안 및 U자형 전력망 구축							산업부 해수부 기재부
· HVDC 핵심기술개발							산업부
· AI 기반 차세대 전력계통운영시스템 개발							산업부 과기정통부
· ESS 중앙계약시장 및 VPP 제도 설계							산업부
· 지역별 요금 설계안 마련							산업부 지자체
㉡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 제6차 신재생기본계획 수립							산업부 환경부
·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개편							산업부
· 햇빛바람연금 확대 및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 해상풍력 설치선 건조·전용항만 설치							산업부 해수부
· RE100산단 특별법 제정							산업부 국토부 고용부 환경부

자료 : 국정기획위원회

■ 대규모 송전망과 함께 ESS, 분산 에너지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미래형 전력망으로 전환

- 넓은 의미에서 에너지 고속도로는 초고압 직류송전(HVDC) 외에도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장거리 송전선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계통안정화 설비, AI 제어, 분산 에너지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복합 전력 네트워크를 의미
- 정부는 중앙 집중형 구조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친환경적인 미래형 전력망을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 고속도로의 핵심 구성 요소에 대한 고른 육성을 추진
- 이를 위해 '25년 처음으로 시행된 ESS 중앙계약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전남에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실증사업을 실시할 계획
 -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은 재생에너지, ESS 등의 분산에너지를 AI로 제어해 지역 배전망 단위에서 전력의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을 말함

■ 에너지 고속도로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투자비 조달 방안 마련, 전력시장 제도 개편 및 요금체계 변경, 핵심 기술 확보 등의 과제 해결이 병행될 필요

- 대규모 송전망 건설과 재생에너지 확대, 분산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은 많은 투자비와 사회적 수용성이 필요한 작업으로 향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가계의 요금 수용력이 에너지 전환의 관건이 될 전망
- 송전망의 경우 국내 산업 구조상 한전이 투자 책임을 맡겠지만, 장기적으로 재원 마련을 위해 발전사·수요자가 송전요금을 적절하게 부담하는 방안 모색
- 정부는 전력 생산-소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송전비용·입지여건을 반영하여 지역별로 도·소매 전기요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차등요금제를 도입할 계획
-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필요한 핵심 설비 중 국내 기업들이 아직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주요 기자재의 국산화도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질 필요 

■ 에너지 고속도로의 주요 구성요소

#	구성	내용
1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HVDC 기반 해상그리드
2	지역 간 에너지 고속도로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
3	지역 내 에너지 확보	분산에너지를 통한 지산지소 (지역생산, 지역소비)
4	에너지 기초공사	계통안정화 설비
5	에너지 휴게소	망 혼잡 제어용 ESS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정책연구소

■ 전력시장 가격과 한전의 판매 가격 동향



자료 : EPSIS

JP Morgan, 소비 생태계 구축으로 카드 1위 공고화

서유나 연구원

미국 신용카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JP Morgan Chase는 공격적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 M&A, 마케팅 등 적극적인 투자를 기반으로 여행, 외식, 쇼핑 등 일상에서의 모든 소비 여정을 아우르는 생태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글로벌 금융사들도 외식, 엔터테인먼트 등 라이프스타일 서비스 기업과의 투자 및 제휴를 통해 생활 금융 플랫폼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금융그룹들도 고객 접점을 넓히고 금융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소비 여정을 연결하는 생태계 구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미국 신용카드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한 JP Morgan Chase는 공격적 확장을 지속^[1]

- JP Morgan Chase(이하 JPMC)는 '24년 미국 신용카드 부문 1위(거래액 기준)인 시장 입지 공고화를 위해 M&A, 마케팅 등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
 - 신용카드 대출 점유율을 '24년 17.3%에서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
- 고객 라이프스타일 전반의 생태계를 구축해 고객생애가치(lifetime value)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지속 성장 기반을 강화
 - '24년 신규 카드 고객의 생애가치는 '19년 대비 40% 증가했으며, 신규 고객에 대한 투자 대비 수익률(ROI)은 약 2배에 도달

■ JPMC는 여행, 외식 등 일상에서의 모든 소비 여정을 아우르는 생태계 구축을 추진

- (여행) 여행 플랫폼 'cxLoyalty Group'과 고급 여행사 'Frosch International Travel'를 인수하여 자체 여행 서비스 'Chase Travel'을 구축
 - 지난해 420만 명이 'Chase Travel'을 통해 여행을 예약하며 미국 3위 여행사에 등극^[2]
- (외식) 레스토랑 리뷰 플랫폼 'The Infatuation'을 인수한 후 'Chase Dining'에서 프리미엄 신용카드 소유자를 대상으로 인기 레스토랑 예약, 이벤트 등을 제공
- (쇼핑) 판매자 채널을 통한 직접 구매 대비 최대 15배의 리워드 적립 및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 쇼핑 포털 'Shop Through Chase'를 운영
 - 원하는 혜택을 선택해 구매 시 크레딧을 적립하는 'Chase Offers' 기능도 제공

[1] "JPMorgan, Already No.1 in Card Spending, Wants Even More", The Wall Street Journal, 2025.8.26

[2] "Inside Chase's Aggressive Consumer Strategy: More Deposits, More Cards, More Branches, More Lending" The Financial Brand, 2025.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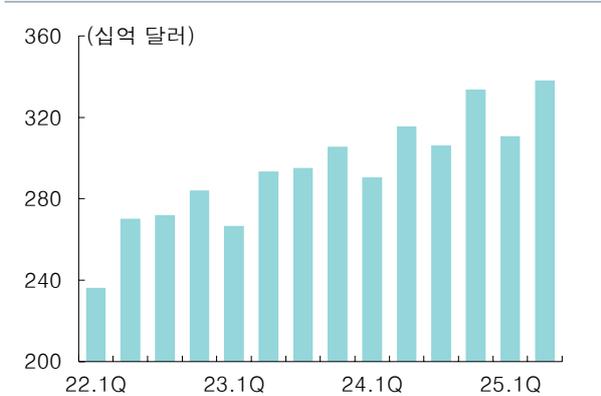
■ 글로벌 금융사들도 라이프스타일 서비스에 투자 및 제휴해 생활 금융 플랫폼을 강화

- Capital One은 인수,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라이프스타일 서비스 기업과 연계해 여행, 쇼핑, 외식,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자체 플랫폼을 운영
 - 온라인 쇼핑 도구 개발사 'Wikibuy', 여행 대행사 'Hopper' 등에 투자해 카드 리워드로 상품 구매, 비행기·호텔 예약 등이 가능한 'Capital One Shopping, Travel'를 개발
- HSBC는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외식, 엔터테인먼트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브랜드 Live+를 국가별로 맞춤 설계
 - 인도 1위 레스토랑 및 배달, 티켓 플랫폼 'Zomato'와 협력해 Zomato 앱 내에서 자사 카드 결제 시 레스토랑 할인과 문화 행사 선예매, 독점 할인 등을 제공
- American Express는 레스토랑 예약 플랫폼 'Resy', 'Tock' 등을 인수해 식사 크레딧, 독점 레스토랑 예약권 등 다이닝 서비스를 제공

■ 국내 금융그룹들도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포괄하는 '소비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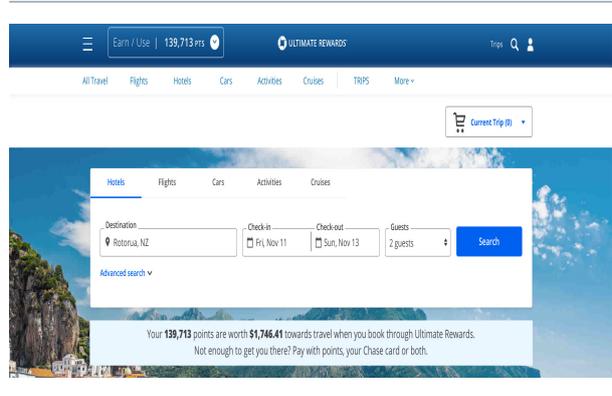
- 국내의 경우 부수업무 규제, 자회사 출자제한 등으로 금융회사의 비금융 진출이 제한적이나 최근 부수업무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
 -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KB리브모바일'('24.5), 신한은행의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뽕겨요'('25.5) 등이 비금융 부수업무로 정식 승인
- 국내 금융사들도 고객 접점을 넓히고 금융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소비 여정을 연결하는 생태계 구축을 전략적으로 강화할 필요
 - 라이프스타일 소비 플랫폼은 생활 전반의 지출 데이터를 확보하고 소비 패턴을 분석해 개인화된 금융 서비스 및 수익 선순환 구조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 

■ JP Morgan의 신용카드 거래액 추이



자료 : JP Morgan Chase

■ JP Morgan의 'Chase Travel'



자료 : JP Morgan Chase

글로벌은행, CS 공백에 스위스 진출 확대

정 안 선 연구원

'23년 UBS는 파산위기에 직면한 Credit Suisse를 인수했다. 이후 정부는 단일은행체제로 발생할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UBS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는 UBS의 성장에 제약으로 작용했고 스위스 IB, 기업금융 시장 내 공백을 야기했다. 주요 글로벌은행은 새로운 기업손님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스위스 시장 진출하고, 사업을 확장하여 기회를 선점하는 중이다. 국내 은행들도 해외 진출시 실행력을 제고하여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 '23년 UBS는 Credit Suisse(이하 CS)인수 이후 규제 강화로 성장이 제약^[1]

- CS는 리스크 관리 실패로 인한 막대한 손실, 대규모 고객 데이터 유출, 마약 자금 세탁 사건, 투자자 신뢰 하락으로 뱅크런을 야기하여 파산위기 직면
 - '22년 4분기, '23년 1분기 각각 \$1,190억, \$686억 규모의 예금 인출이 발생
- '23.3월 스위스 당국은 CS발 위기가 금융 시스템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사인 UBS의 CS 인수를 긴급하게 추진
 - 주주의 승인 없이 긴급하게 합병이 이루어지고 금융당국과 국립은행이 협상을 주도하여 정부는 유동성 공급과 인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잠재적 손실 보충
- UBS가 스위스 내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자 스위스 당국은 단일은행체제로 파생될 문제를 막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강화해 UBS는 비즈니스 수행에 제약
 - 추가 핵심 자본 적립, 해외 자회사 완전자본화 의무화, AT1 채권 의존도 축소 등 규제를 강화하고 UBS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

■ UBS의 Credit Suisse 인수 및 성장 제약은 스위스 IB, 기업금융 시장 내 공백을 발생^[2]

- 스위스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핵심 파트너였던 CS의 붕괴가 IB, 기업금융 시장 내 공백을 야기
- CS에 장기간 의존하던 중소기업들은 해외 확장 및 투자자금 조달, 현금 관리, M&A 등에 어려움을 경험
 - '24년 스위스 중소기업 관련 M&A 건수는 179건으로 전년대비 약 9% 감소

[1] "UBS to buy Credit Suisse in \$3.3 billion deal to end crisis", Bloomberg, 2023.3.20

[2] "Global banks rush into Credit Suisse vacuum to serve Swiss companies", Financial Times, 2025.9.7

- 특히, 강화된 규제가 UBS의 대규모 기업금융이나 IB 사업의 영위에 제약으로 작용하며 스위스 기업금융 시장 내 공백을 심화

■ 이를 기회로 주요 글로벌은행은 새로운 기업손님 확보를 위해 스위스 시장에 적극 진출

- Citi, BofA 등 주요 은행들은 기존 스위스 은행과는 다른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스위스 시장 진출과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Citigroup) '22년부터 스위스 상업은행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해 무역금융, 외환 등 국제 거래 관련 서비스로 연매출 \$1억~30억 규모의 중견 기업을 공략
 - (Bank of America) 기업대상 대출, 예금 및 현금관리 서비스를 스위스 프랑으로 제공해 현지 통화 기반의 서비스 역량을 강화
- 또한, 스위스 내 기업금융 관련 인력 확충, 현지 법인 설립 및 조직 강화 추진
 - (BNP Paribas) '22년 이후 약 50명의 투자은행 인력을 선제적으로 추가 고용
 - (Deutsche Bank) '24년 취리히에 스위스 중견 기업을 겨냥한 전담팀 설립
 - (JPMorgan) 스위스 내 법인 및 투자은행 인력을 10% 증원하고 '25년 기업금융 부문 핵심 인력을 스위스에 배치하며 조직적인 구조를 현지에 맞게 재정비

■ 국내 은행도 해외 진출 시 실행력을 제고하여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기민한 대응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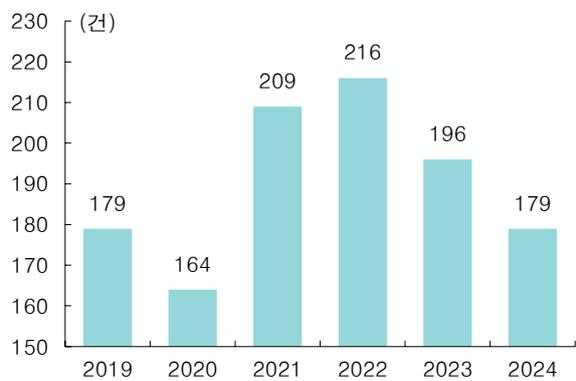
- 글로벌은행들은 현지팀 증강, 현지 규제대응, 맞춤형 상품개발, 법인 설립 등 신속한 변화에 적응하여 기회 선점 중
- 국내 은행도 해외진출 시 라이선스 확보, 현지 인력, 상품 커스터마이징, 현지 제휴, 핀테크 협업 등 실행력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 

■ Credit Suisse 붕괴 이후 규제 강화 내용

강화된 규제	내용
추가 핵심 자본 적립	스위스 정부는 UBS에 최대 \$260억의 추가 핵심 자본 확충을 요구
해외 자회사 완전자본화 의무화	UBS는 해외 자회사를 완전히 자본화할 것을 요구 (약\$230억 추가 CET1 자본에 해당)
AT1 채권 의존도 축소	정부는 UBS가 AT1 채권 보유량을 \$80억 줄일 것을 요구

자료 : 언론종합

■ 스위스의 중소기업 관련 M&A 건수



자료 : Deloitte

금리: 美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재개에도 시장금리는 반등

민 현 하 연구원

美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통화정책 전망 불확실성으로 반등했다. 韓 금리는 주택가격 상승 부담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이 확대되며 소폭 상승했다. 9월 FOMC는 인플레이션 경계에도 고용 둔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25bp를 인하했으나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으며 향후 발표되는 데이터에 따라 통화정책 기대가 변화할 전망이다. 韓 시장금리는 대미 관세 협상, WGBI 반기 리뷰 등 수급 불안 요인이 상방 압력을 작용할 전망이다.

■ 美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하락 후 통화정책 전망 불확실성으로 반등

- 美 금리는 고용 둔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의 기준금리 인하기로 하락했으나 추가 금리 인하는 매우 데이터 의존적일 것이라는 파월의 발언으로 반등
 - 美 2/10년물 금리(%) : 8월 말 3.62/4.23 → FOMC(9.18일) 3.57/4.11 → 9.25일 3.66/4.17
- 또한, 美 25.2Q GDP 확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내구재 수주도 예상치를 상회하며 美 경제가 반등하고 있음을 보이며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론 대두
 - 美 25.2Q GDP(%QoQ) : 속보 3.3 → 확정 3.8 / 8월 내구재 수주(%MoM) : 예상 0.5 → 실제 2.9
- 日은 2%를 상회하는 높은 물가 상승세 지속으로 BOJ의 기준금리 인상 재개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日 장단기 금리 모두 상방 압력 부각
 - 日 2/10년물 금리(%) : 8월 말 0.89/1.61 → 9.25일 0.93/1.64

■ 韓 금리는 주택가격 상승 부담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시기 지연 가능성으로 소폭 상승

- 韓 금리는 금통위원들의 주택가격/가계부채 안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이 지속되며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 소폭 상승
 - 韓 2/10년물 금리(%) : 8월 말 2.43/2.82 → 9.25일 2.53/2.85
- 한은은 거시건전성 정책이 통화 정책보다 선행되어야 정책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금융 불균형 이슈 해소가 기준금리 인하의 핵심임을 시사
- 韓·美 통화정책의 방향성이 불확실성을 보임에 따라 외국인들의 국채 선물 수요도 위축되며 시장금리 상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
 - 외국인 국채 3년물 순매수(계약) : 8월 +45,421 → 9.25일 기준 -58,3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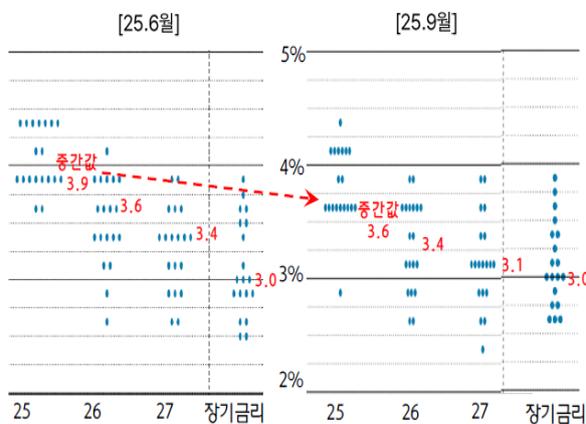
■ 9월 FOMC, 인플레이션 경계에도 고용 둔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25bp 인하

- 연준은 양대 책무가 모두 도전받는 상황에서 관세發 물가 상승보다 고용 하방 위험이 커졌다 판단하며 위험 관리 차원의 기준금리 25bp 인하 단행
 - 파월은 50bp 인하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는 없었다고 언급하며 점진적인 인하 시사
- 美 고용은 공급과 수요가 모두 감소하는 “기묘한 균형의 상황”이지만 최근 3개월간 비농업 고용자 수가 평균 2.9만명 증가하며(25.1~4월 월평균 +12.3만명) 둔화되는 추세
 - 파월은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관세의 인플레이션 전가 효과가 예상보다 낮고 규모도 작아 관세발 인플레이션 위험은 단기적이며 일시적일 수 있다고 언급
- 금번 FOMC에서 점도표 중앙값은 하향 조정, 성장과 물가 전망치는 상향 조정하는 등 명확한 방향성 부재로 차후 발표되는 데이터에 따라 통화정책 기대가 변화할 전망

■ 韓 금리는 대미 관세 협상, WGIB 편입 관련 불확실성 등이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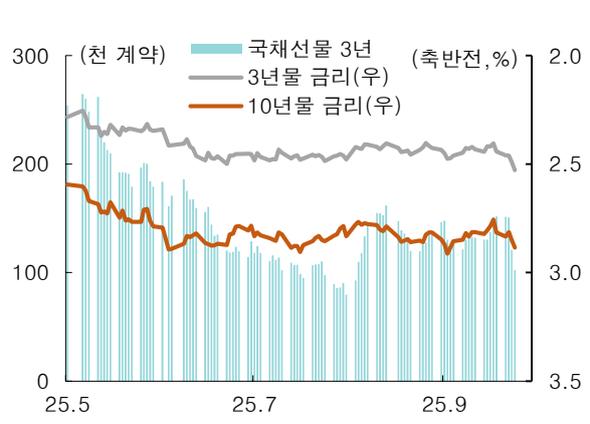
- 美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은 유지되지만 고용 및 물가 지표에 따라 시장의 통화정책 기대가 변화하며 데이터에 대한 시장 민감도가 확대될 전망
- 한은은 주택가격/가계부채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통화정책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축소되는 상황
 - 경기 지표 부진 고려 시 추가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은 있으나 주택시장이 제약 요인
- 韓 시장금리는 韓·美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외국인 매수세 축소, WGIB 반기 리뷰 발표(10.7일) 등 수급 불안 요인으로 금리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韓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각각 2.45%~2.65%, 2.75%~3.00% 범위로 전망 

■ 美 연준 기준금리 점도표 변화



자료 : Fed, 하나금융연구소

■ 외국인 국채 3년 선물 누적 순매수 및 3,10년물 금리 추이



자료 : 인포맥스, 하나금융연구소

외환: 3,500억 달러 투자펀드라는 변수

김 영 준 연구위원

원/달러 환율은 美 금리인하 기대감 등으로 1,370원대까지 하락한 후 대미투자 패키지 관련 불확실성과 달러화 매수세로 1,400원대에 재진입했다. 달러화는 고용지표 부진과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 시사로 약세를 보이다 2Q 성장률 서프라이즈로 반등했다. 3,500억 달러 투자펀드의 투자 및 운용방식을 두고 한·미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 중이다. 다만 협상이 진척될 경우 불확실성 해소로 여겨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레벨 다운할 수 있을 것이다.

■ [원/달러 환율] 美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하락했다가 1,400원대로 급반등

- 원/달러 환율은 美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인한 달러화 약세와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및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에 힘입어 1,370원대로 하락
 - 美 연준은 9월 FOMC에서 고용 둔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고 점도표를 통해 연내 2회 추가 금리인하를 예고
- 이후 파월 의장의 금리인하 속도조절 발언으로 달러 약세가 주춤하고 저가매수세 유입 등으로 인해 역내 결제가 달러수요 우위로 돌아선 영향으로 1,400원 상향돌파
 - 3,500억 달러 대미투자 패키지를 둘러싼 한·미간 이견도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

■ [국제 환율] 달러화는 금리인하 기대로 약세를 보이다 경제지표 호조로 반등

- 美 달러화는 고용지표 부진과 연준의 연내 2회 금리인하 시사 등으로 약세를 보이다 2분기 성장률 상향조정(3.3%→3.8%) 등 경제지표 호조에 힘입어 반등
 - 마이런 연준 이사의 발언과 10월초 연방정부 섰다운 가능성은 약세 요인
- 유로화는 프랑스 정부 불신임 및 신용평가사 Fitch의 신용등급 강등과 드론을 둘러싼 러시아와의 군사적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대비 강세를 기록
 - 9.12일 Fitch는 심화되는 재정위기와 정치적 분열을 반영하여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의 AA-에서 A+로 한단계 하향조정
- 日 엔화는 BOJ 금리인상 소수의견 확인 및 자산매각 계획 등으로 강세를 보이다 美 경제지표 개선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기록하면서 약세로 반전
- 中 위안화는 생산, 소비, 투자 관련 경제지표가 두달 연속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지만 미중 협상 기대감에 강보합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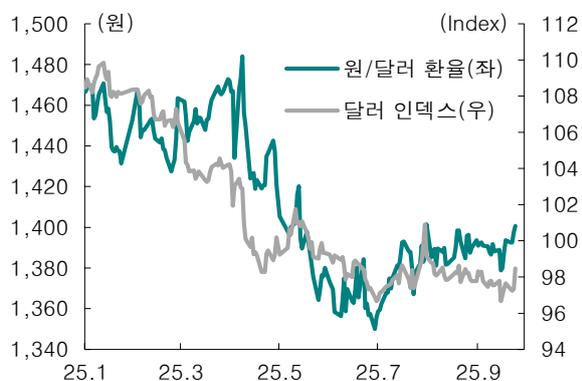
■ 3,500억 달러 투자펀드 성격에 대한 한-미간 이견으로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 8월말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펀드의 투자 및 운용방식을 두고 한-미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외환시장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
- 미국은 100% 현금의 직접투자를 요구 중이며, 한국은 직접투자 비율을 최소화하고 대출 및 보증 형식을 취하자는 입장으로 알려졌음
 - 미국의 요구대로 외환보유고 등을 이용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직접투자(입금)할 경우 달러화 수급이 급격히 경색되면서 외환시장이 크게 흔들릴 소지
- 정부는 3,500억 달러 투자 관련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한미간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에 설득 중이나 답을 얻지 못한 상황
 - 정부는 통화스와프 체결은 '필요조건'일 뿐, 양국간 국익에 상호 부합하는 상업적 측면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

■ 원/달러 환율, 투자펀드 관련 불확실성으로 1,400원대 지속 예상

-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연준이 연말까지 50bp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10월초 연방정부 섯다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약세 흐름이 예상
- 반면, 원화는 3,500억 투자펀드와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약세 흐름이 계속될 전망
 - 수입업체 결제와 해외투자를 위한 환전 수요 등 달러 실수요 매수세가 역내 수급에서 우위를 차지하면서 원/달러 환율의 하방 경직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 다만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 등 관련된 협상이 진척될 경우 달러수급 관련 불확실성 해소로 여겨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한단계 레벨 다운할 수 있는 상황
 - 원/달러 환율은 1,380~1,420원에서 주거래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 

■ 원/달러 환율 및 달러 인덱스 추이



자료 : Bloomberg

■ 한국 외환보유액 추이



자료 : 한국은행

부동산: 정부, 공공주도 주택공급 확대(9.7 대책) 추진

황 규 완 연구위원

6.27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이 발표되었다. 이로써 유동성 조정에 기반한 수요 관리(6.27 대책)와 더불어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9.7 대책)하는 신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책의 기본 골격이 완성되었다. 공공 주도의 주택공급은 공급 정책의 실효성이 높다는 장점은 있으나 분양가격 관리가 관건이다. 행정절차 간소화 등 민간 공급을 유도하는 대책도 포함되어 있으나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로 인한 개발사업 수익성 저하 문제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6.27 대책의 영향으로 수도권 거래량 급증세가 크게 꺾이는 등 주택시장 과열은 진정

- 6.27 대책 발표 이전까지 수도권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큰 증가세를 보여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이 지속
 - 6월까지 전국의 누적 매매거래량은 전년동기대비 15.3% 증가했으나 수도권은 30.8%, 서울은 55.5% 증가하는 등 수도권 매매거래량이 크게 증가
- 반면, 대책 발표 후인 7월에는 매매거래량 증가폭이 크게 꺾이는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은 진정된 것으로 확인
 - 수도권의 7월 매매거래량은 전년동월대비 7.9% 감소해 6월(49.7% 증가) 대비 진정
 - 비수도권 거래량 역시 전년동월대비 3.5% 감소하는 등 규제 비적용 지역도 영향

■ 공공이 주도하여 공급을 확대하는 9.7 대책 발표로 신정부 주택정책의 골격이 완성

- 정부는 LH(토지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에서 직접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공급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을 발표
 - 기존에는 공공은 택지 공급을, 민간은 자금모집, 착공 및 분양을 분담했으나 시장 침체기에는 공급 급감 및 이후 공급 부족이 반복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증폭
- 특히, 정부의 주택공급 핵심지표를 인허가에서 착공으로 전환하고, 법률 개정으로 공공택지의 주택 공급 주체를 공공으로 명기하는 등 제도적 실효성 확보도 병행
 - LH 등이 정부의 정책 기조에 입각해 적극적으로 미개발 공공용지에 주택을 공급할 전망
- 이로서 유동성 조정에 기반한 수요 관리 기조(6.27 대책)와 더불어 LH와 같은 공공이 적극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 관리 기조(9.7 대책) 등 신정부 부동산 시장 정책의 기본 골격이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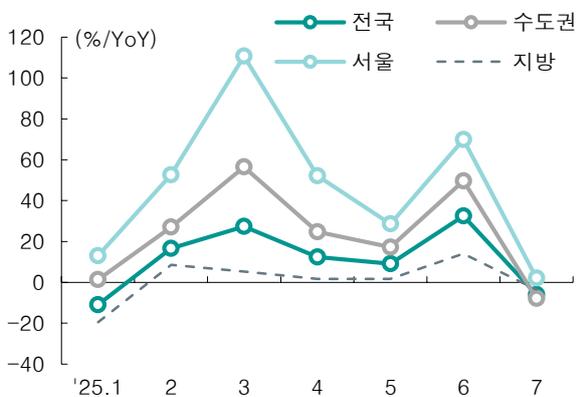
■ 민간 주택 브랜드를 사용하는 등 시장 기대는 크나 분양가 관리가 이슈가 될 전망

- 구체적인 사업 구조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않았으나 공공 분양의 경우 기존의 ‘민간 참여 공공 주택 사업’과 유사한 구조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 민간 참여 공공 주택 사업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주택을 건설하는 공공 분양 사업으로 '14년 도입 이래 총 7만여호의 주택이 공급
- 공공이 주택공급을 주도함에 따라 모듈러 주택, 제로에너지 주택 등 건축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주택 건설의 기술 혁신을 도모할 가능성도 높음
- 민간 주택 브랜드 및 자금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고, LH의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는 장점이 있으나 분양가격 관리가 이슈가 될 전망
 - 건축자재 가격은 안정화되었으나 공사기간 장기화, 높아진 인건비 등이 부담

■ 민간의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책도 제시되었으나 사업 수익성 개선 여부가 중요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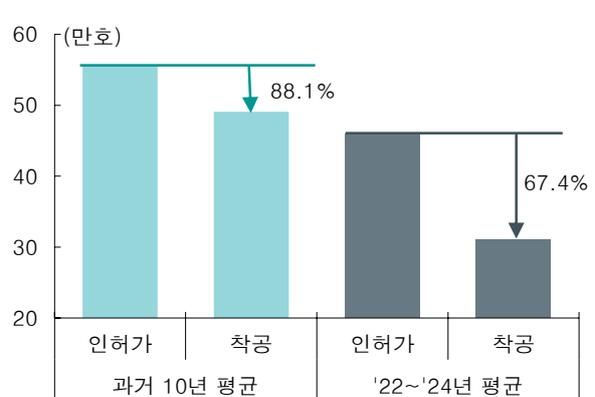
- 민간의 공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개선,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 등 지원 대책도 제시
 - 과거 10년간 건설 수주액 기준 공공부문 주택과 민간부문의 비중은 1:9
- 주택 개발 단계별 절차의 간소화, 통합 심의 등 사업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안이 지원 대책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이 포함
 -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
- 다만, 민간의 공급 위축은 부동산 경기 위축 장기화 및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 수익성 저하가 주된 원인으로 절차 단축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 여부가 공급 확대의 주요한 이슈가 될 전망 

■ 지역별 주택 매매거래량 변동률



자료 : 국토교통부

■ 주택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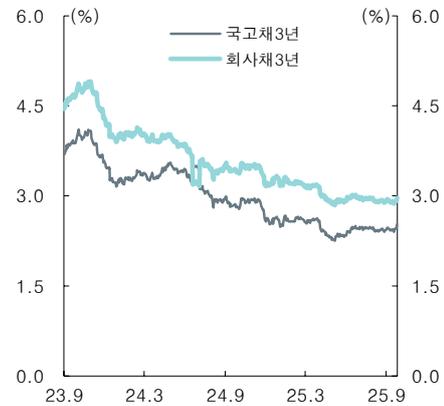


자료 : 국토교통부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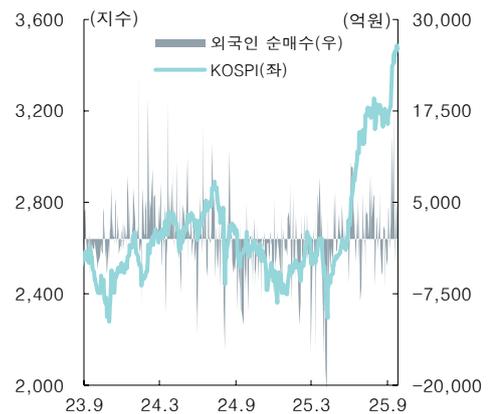
금리

단위: %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23년말	3.91	3.83	3.69	3.90	3.15	3.16
'24년말	3.33	3.39	3.01	3.28	2.60	2.76
8월말	2.52	2.53	2.49	2.91	2.43	2.58
9월 19일	2.52	2.57	2.53	2.90	2.44	2.58
9월 22일	2.54	2.56	2.53	2.91	2.46	2.61
9월 23일	2.54	2.58	2.54	2.91	2.46	2.60
9월 24일	2.53	2.58	2.54	2.94	2.49	2.63
9월 25일	2.53	2.59	2.56	2.97	2.53	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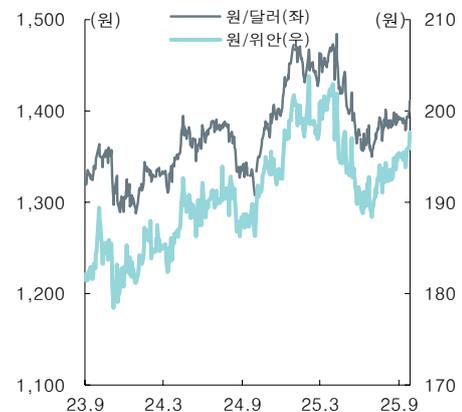
주가

	KOSPI (지수)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23년말	2,655.3	94,189	460	7,017
'24년말	2,399.5	53,155	304	-1,207
8월말	3,186.0	89,693	245	-3,725
9월 19일	3,445.2	151,113	349	-3,062
9월 22일	3,468.7	119,962	288	5,682
9월 23일	3,486.2	121,524	358	3,366
9월 24일	3,472.1	118,070	287	-2,465
9월 25일	3,471.1	126,408	293	2,164



환율

단위: 원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23년말	1,288.0	911.0	181.2	1,425.1
'24년말	1,435.5	928.0	197.0	1,487.9
8월말	1,390.1	945.2	194.9	1,624.1
9월 19일	1,393.6	941.6	195.8	1,636.1
9월 22일	1,392.6	942.6	195.7	1,643.7
9월 23일	1,392.6	943.2	195.8	1,645.0
9월 24일	1,397.5	938.3	195.9	1,640.2
9월 25일	1,400.6	934.4	196.3	1,63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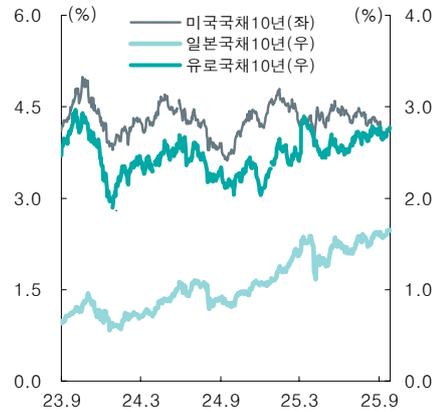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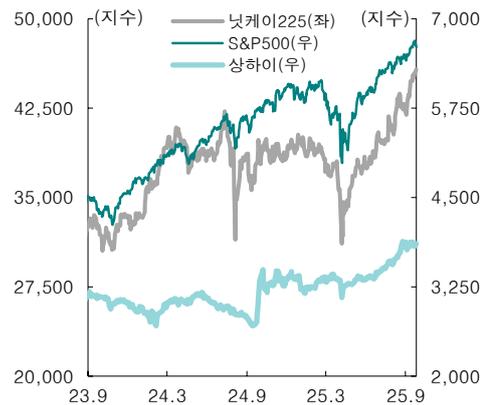
:: 금리

단위: %	미국				일본	유로
	실효FR	SOFR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국채10년
'23년말	5.33	5.33	4.25	3.88	0.61	2.02
'24년말	4.33	4.31	4.24	4.57	1.10	2.37
8월말	4.33	4.36	3.62	4.23	1.60	2.72
9월 19일	4.08	4.38	3.57	4.13	1.65	2.75
9월 22일	4.09	4.37	3.60	4.15	1.65	2.75
9월 23일	4.09	4.37	3.59	4.11	1.65	2.75
9월 24일	4.09	4.37	3.60	4.15	1.65	2.75
9월 25일	-	4.36	3.66	4.17	1.65	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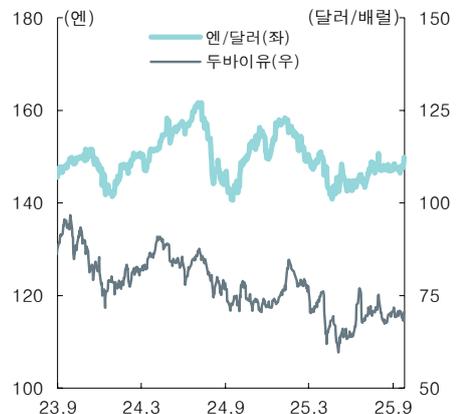
:: 주가

단위: 지수	S&P500	닛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23년말	4,769.8	33,464.2	2,974.9	4,521.4
'24년말	5,881.6	39,894.5	3,351.8	4,896.0
8월말	6,460.3	42,718.5	3,857.9	5,351.7
9월 19일	6,664.4	45,045.8	3,820.1	5,458.4
9월 22일	6,693.8	45,493.7	3,828.6	5,442.1
9월 23일	6,656.9	-	3,821.8	5,472.4
9월 24일	6,638.0	45,630.3	3,853.6	5,464.6
9월 25일	6,604.7	45,754.9	3,853.3	5,444.9



:: 환율/상품

	환율		상품(유가 현물, 금 선물)	
	엔/달러(엔)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23년말	141.36	1.106	79.1	2,083.5
'24년말	157.36	1.036	75.9	2,641.0
8월말	146.99	1.168	70.5	3,516.1
9월 19일	147.91	1.174	69.3	3,705.8
9월 22일	147.72	1.180	68.6	3,775.1
9월 23일	147.56	1.181	68.2	3,815.7
9월 24일	148.87	1.174	69.9	3,768.1
9월 25일	149.81	1.166	70.6	3,775.0



자료 :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하나금융포커스

제15권 19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5년 9월 26일 인쇄

2025년 9월 29일 발행

발행인 이호성

편집인 안성학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 의견으로
하나금융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5권 19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E-mail hanaif@hanafn.com